

건강칼럼

수전증과 파킨슨병

손을 떠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대다수는 치료가 불가능한 노화의 증상으로 치부한다. 손이 떨리고 행동이 어둔해지는 증상, 특히 걸음걸이가 불편한 증상을 단순히 노화과정으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볼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떨림은 몸의 일부 또는 전체가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고 떨리는 (흔들리는) 증세를 말한다. 떨림은 이상운동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다. 떨림은 몸의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 있으나 손떨림이 가장 흔하며 이외에도 머리나 턱이 떨리는 증세가 있을 수 있고, 허, 몸통에도 나타날 수 있다.

보통 떨림 증상이 가장 흔한 곳이 손이기 때문에 '손떨림' 혹은 '수전증'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떨림의 원인은 크게 △생리적 떨림 △파킨슨병 증상 중 하나로 생기는 떨림 △특별한 원인이 없는 본태성 떨림 △약물 복용으로 발생한 약물유도성 떨림이다. 스트레스가 있거나 몸이 긴장하는 상황일 때, 피곤할 때, 특정약물을 복용했을 때,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과다하게 먹었을 때, 저혈당이나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있을 때 생리적 진전이 항진되어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 한쪽 팔에서만 떨림이 있거나 양측에 있더라도 두드러지게 비대칭적인 안정시 떨림이 있는 경우 파킨슨병의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파킨슨병 떨림의 경우 안정시 떨림과 함께 서동증(행동이 느려짐), 경직, 표정변화, 걸음걸이가 장애 등 다른 파킨슨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병의 초기에 다른 증상 없이 안정시 떨림만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있어서 이러한 경우 단순한 떨림인지 파킨슨병인지 구분이 쉽

지 않을 수 있다. 또 초기 떨림과 함께 손발의 뻣뻣함과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 단순 관절염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받기도 한다. 노인들의 경우 증증이 아닌 거각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혈액순환장애나 증증으로 생각하고 적절하지 않은 약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떨림증상과 팔다리가 어둔한 증상은 뇌졸중, 증증으로 오해되기 쉽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증으로 인한 떨림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반드시 신경과 전문가의 진찰을 통해 정확한 질환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떨림이 있어 진료를 받을 때에는 꼭 복용 중인 약물의 처방전이나 약제를 담당 전문의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떨림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단순한 퇴행성 증상으로 간주하고 방치하기보다는 가까운 신경과를 방문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지훈

365병원 신경과 과장

독자제언

연말연시, 음주운전을 지양하자

12월의 중순에 접어들며 직장 회식 등 약속이 늘어나고 있다. 회식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술. 술은 일상생활에서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지친 일상의 탈출구가 된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선택하는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미수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큰 범죄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자연스럽게 음주운전으로 이어지고 인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는 사고로 평생 불구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지양 분위기가 조성되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단속 구간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까지 있다니 아이러니할 뿐이다. 경찰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과 주·야간을 가리지 않는 꾸준한 음주운전 단속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의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은 0.05%로 다른 선진국들(일본 0.03%, 미국 0.03% 등)과 비교하면 너무 관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4월25일부터 면허 취소 수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음주 운전으로 상해,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차량 몰수 대상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면허 정지, 취소 등 행정상 불이익이 가다 리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경제적 손실과 심적 고통 등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무모한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 것이다. 음주운전은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닌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야 한다. 이주연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인터넷 물품사기방지 이렇게 예방을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에 경기 이천에서 불법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6개월간 총 235회에 걸쳐 약 2400만원을 편취한 28세 남자를 검거했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회원수가 1400만 명인 것을 보면 그만큼 인터넷 물품 거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이버 상거래가 활발해지는 이유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물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물품을 거래 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 때문이다. 인터넷의 비대면성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서 거짓 판매 글을 올리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런 인터넷 물품사기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이 최선이다. 사기를 당하기전에 예방방법을 미리 숙지하여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결제시스템(escrow)라는 제도를 이용한다. 소싱몰 등을 이용할 경우 물품 구매 전 해당사이트가 진짜인지 아닌지 만

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결제시스템이란 소비자가 물건 값을 공신력 있는 은행 등 제 3자에게 보관하였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제도이다.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인터넷 사기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둘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cybertureau.police.go.kr) 또는 모바일 어플 사이버 갑에서 피해예방정보 검색을 통해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사기 신고에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본다. 셋째, 자신만의 확인 습관을 기른다. 상품대금을 현금결제로만 유도하는 경우를 주의하고, 사업자정보를 확인한다. 사업자 등록번호, 통신판매업신고번호의 허위도용여부는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과거가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를 주의하고 선착순, 공구매 등 사행성 판매방식에 현혹되지 않는다. 또 게시판 이용후기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배송지연, 환불 등의 내용이 있으면 신중히 보아야한다. 신희선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사설

소상공인 지원 약속대로 실천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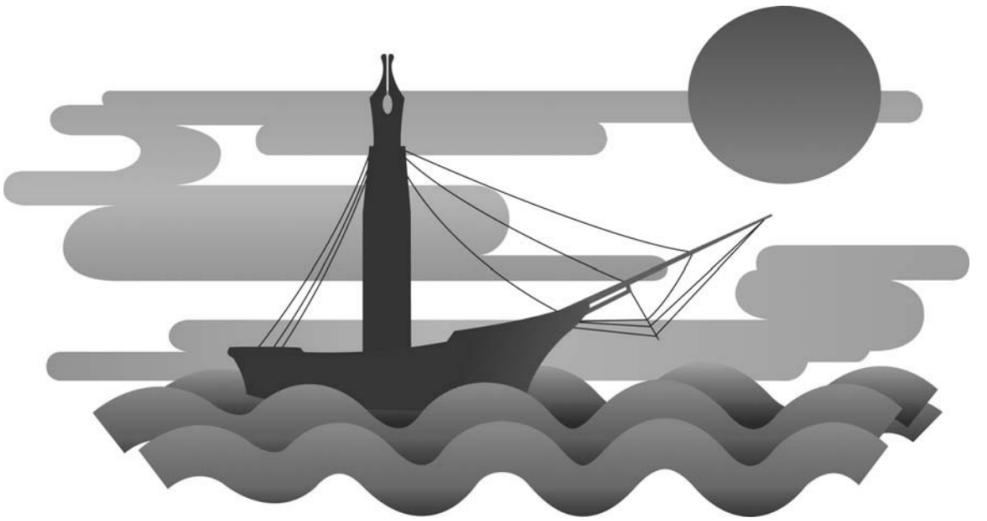
전북도가 소상공인 돕겠다고 나선지 이제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지금 다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 2천1백원의 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을 도우면서 경영 안정 자금도 지원한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다. 도내 소상공인들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최근 들어서 더 우러들어 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저번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도내 1만3천 개 기업을 위해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지금 뜸 그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법도 하다. 전북도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마음을 써야 한다.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딱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체감 경기가 싸늘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은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있다. 그리고 더욱 답답한 것은 군산 조선소 문제이다. 예전처럼 제대로 가동돼야 협력업체들이 현상유지라도 할텐데 앞날이 걱정이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기대대로 잘 굴러가야 할텐데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조마조마하다. 그리고 요즘 자꾸 들먹거리 는 공공요금인상이며 물가 인상도 문제이다. 그게 다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마이너스로 작용할테니 말

이다. 현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약발은 전혀 없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 가결이 말하는 그대로 지난 수년간 현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한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공감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현정부가 줄곧 재벌 위주의 경제 정책을 편 것은 주주의 사실이다. 그래도 전북도가 그동안 소상공인과 함께 가는 행보를 보여주었음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이들이 아직도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감질 영업을 일삼았던 은행들 말이다. 전체 소상공인 30% 정도가 적자 상태라는 보고가 있음에도 은행들의 그런 작태는 말이 안 된다. 전북도는 소상공인들과 함께 가야 한다. 소상공인들 중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다면 도와야 한다. 2천1백억 원의 자금으로 소상공인의 창업을 도우면서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하겠다고 했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어려워도 영업을 계속하도록 동기를 강화시켜주어야겠다.

삼락농정, 선언적 구호에 그쳐선 안돼

연말이 가까운 지금 돌아볼 게 있다. 전북도가 말한 삼락농정 말이다. 삼락농정에 대한 정부의 평가에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게 좀 공감하기가 어렵다. 실제 농민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한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말했던 농생명 산업의 허브와 지적 상권이 어떤지 알고 싶다. 농생명 산업의 발전 주장이 그냥 허투루 돼선 안 된다. 전북도가 그 비전을 제시한 지도 상당한 시일이 지났다. 그러므로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 허브화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의 발전을 위해 말을 꺼내는 것도 의미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것은 더 중요하다. 전북도는 자신의 발언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내 농가들을 위한 이런저런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던 것을 말이다. 전북도가 추진한 삼락농정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 지면을 빌려 다시 언급하거나 그 목표를 전북도가 발표한 그대로 '보람' 찾는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이다. 그래서 전북도는 모두 150개 사업을 선정하고 56개 신규 사업도 발굴해 모두 532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었다. 전북도는 삼락농정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고 여러 번 밝힌 바 있다. 그런데 국내의 현실을 보면 삼락농정의 실현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정부는 지난 수년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그런데 체결들이 농민들에게는 마이너스로 작용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은 보나마나 뻔하다. 그리고 오늘날 농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갈수록 쇠락의 길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농업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드물다. 전북도가 '삼락농정' 비전과 함께 농생명산업의 허브화를 들고 나온 것은 바로 그때문일 터이다. 전북도의 삼락농정은 그 역사가 짧지 않다. 농생명 산업의 허브화 발언도 그렇다. 전북도는 이제 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전북도가 예전에 말했던 수요자 맞춤형 수출 전략도 다시 생각한다. 그리고 농생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기억한다. 전북도는 이제 그 실현을 위해서 힘내야 한다. 농생명 산업을 일으키는 쪽으로 속히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